

“전남광주특별시, 450조 투자유치로 첨단산업 핵심축 탈바꿈”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대기업들의 300조 원 지방투자 계획을 환영하며, 전남광주특별시는 이 중 절반인 15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함께 별도로 신규 300조 원 규모 첨단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지방기 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난 4일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함께한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삼성, SK, 현대, LG 등 대기업이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재계가 공감한 투자 결단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들의 지방투자 300조 원 중 최소한 150조 원 이상을 전남·광주로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에 신규 투자유치를 통해 별도로 300조 원 규모의 첨단

김영록 지사, 대기업 300조 지방투자 계획 발표 환영 대규모 기업투자 위해 지방 우대 금융지원정책 건의도

산업 유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AI·에너지 수도 전라남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특구의 강점을 살려 RE100을 실현할 안정적 친환경 전력, 충분한 용수와 저렴한 산업부지까지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어 반도체·이차전지·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의 최적지”라며 “이러한 최적의 여건을 기반으로 전라남도는 기업과 함께 우리 지역을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거점인 전남·광주 반도체 삼축 클러스터를 비롯해 AI, 로봇(피지컬 AI), 수소,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등을 권역별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권역별로 서부권은 재생에너지산업을 더욱 확대하고 조선산업의 스마트팩토리 전환과 항공산업, 반도체 패키지와 화학물반도체 공장을 적극 유치한다.

동부권은 기존 석유화학·철강산업과 연계해 로봇산업 등 피지컬 AI와 반도체 패키, 수소환원제철,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광주권은 반도체 패키징산업과 함께 광주 민간·공공항 이전부지 100만 평에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헤드인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대적인 투자유치가 실현되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대규모 기업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가장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원칙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의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기존 3%대 금리를 전남·광주에 투자하는 기업은 1%대의 저리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금융위원회와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겠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지방우대 금융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이번 기업의 지방투자계획은 전남·광주가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400만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 시대’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45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우리 전남·광주를 산업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넘쳐나, 청년이 고향에서 꿈과 미래를 펼치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축으로 탈바꿈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염선호 기자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에 장흥·무안 사업 추진시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등 문제점 완화 혜택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에서 전국 5개소 중 장흥군과 무안군 2개소가 선정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장흥군과 무안군 육성지구 임대형 스마트팜은 2028년까지 개소당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이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 시설로 구축될 예정이다.

육성지구 선정 혜택은 인허가 의제(관련 시설 건립 간소화), 공유재산법 특례(수의계약·20년 장기임대·대부료 50% 감면·영구시설물축조) 등 사업추진 시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등

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전남도와 시군은 이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을 위해 사전 협의 회를 갖고 서류 및 사업대상지 현장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서 수립 방법, 사업 추진 역량, 대상 지역의 입지 조건, 주변 현장 여건, 스마트농업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전남도는 그동안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 155명을 양성·수료하는 등 청년 인재 육성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했다.

이번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교육, 실습, 영농 정착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필 기자

전남도, 우수건축물 전시로 ‘생활 속 건축문화’ 확산 도청 갤러리서 27일까지... 공공건축 첫 대상작 포함 20점

전라남도는 도시 미관 향상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도청 갤러리에서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전시회’를 열어, 최근 4년간 선정된 수상작을 통해 생활 속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도민과 공유한다.

전시회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우수건축물 가운데 대상 1점, 최우수상 4점, 우수상 7점 등 총 20점의 수상작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전남도는 매년 지역의 우수건축물을 선정해 건축주에게는 도시사 표창과 기념동

관, 설계자와 시공자에게는 도시사 표창과 상패를 수여하며 건축문화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전시 작품은 지역의 건축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 등 지역 발전에도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도민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건축물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한 결과,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대상 수상작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앞으로 22개 시군 순회 전시를 통해 도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지역 건



축의 우수성과 건축문화의 가치를 현장에서 공유할 계획이다.

임진출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우수건축물 전시회를 통해 지역 건축의 성과와

가치를 도민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건축이 생활 속 문화로 자리잡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7.2억원 투입 3월 20일까지 5등급차 192대 접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 7억2000만 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192대에 매연 저감장치(동시저감장치 포함) 부착을 지원한다.

기후부는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올해까지만 진행하고 종료할 예정이다. 단,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지속 추진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 ▲차량 사용분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사항에 적합한 차량이며 ▲환경부 보조금 지급 자격이 없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지원금액은 소·중·대형 등 장치 크기에 따라 대당 약 260만~63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장치

가격 부담률에 따라 24만~65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2월9일부터 3월2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또는 문서24로 온라인 접수하며, 대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대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후대기정책과 친환경차전환팀(062-613-434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결과는 3월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 선정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저감장치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에는 2년간 의무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우인 기자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5일 2026년도 광주지역의 직종별 필요한 인력 및 훈련 수요전망치를 분석한 ‘2025년도 광주지역 인력·훈련 수요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인자위가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로, 광주지역 52개 산업(KSIC) 내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필요한 직종별 인력 및 훈련 수요전망치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는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광주지역 훈련기관 등에 공유해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설계, 지자체의 2026년도 지역 인력양성사업계획 수립 등 정책 기획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인력수요를 직종별(KECO)로 보면 121개 직종 중 ‘경영지원 사무원’이 8.3%(21,87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올해 직업훈련 선호 직종은?... 광주인자위 분석보고서 발표

구직자 재직자 수요 모두 돌봄서비스 가장 많아

‘돌봄 서비스 종사자’ 7.0%(18,583명), ‘간호사’ 5.8%(15,349명), ‘청소방역 및 가사서비스원’ 5.6%(14,848명), ‘제조 단순 종사자’ 4.9%(13,086명) 등 순으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를 추정한 결과 구직자 대상의 양성훈련과 재직자 대상의 향상훈련에서 모두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양성훈련 수요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17.2%), ‘간호사’(11.1%),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8.1%) 등 순으로, 휴먼 서비스 분야의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향상훈련 수요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17.3%), ‘보육교사’(10.2%), ‘간호사’(9.2%) 등 순으로, 재직자 훈련도 구직자 훈련과 마찬가지로 휴먼 서비스 분야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훈련 수요전망치와 공급 전망치를 바탕으로 수급분석한 결과, 양성훈련은 ‘간호사’(1,056명), 향상훈련은 ‘돌봄서비스 종사자’(2,124명)가 가장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인자위는 훈련 수급의 미스매칭, 지역의 전략적 산업, 취업·일지리의 소외 계층을 위한 훈련과정 등을 자문위원단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6년도에 집중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우선공급 훈련직종 50

개를 최종 선정했다.

양성훈련 총 29개 직종의 주요 직종으로 ▲경영지원 사무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간호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립원 등을 선정했다.

향상훈련 총 21개 직종의 주요직종으로는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등 디지털 전환(DX) 대응 직종과 ▲운송장비 조립원 ▲금형원 등 제조 숙련 기술 전문 직종,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필수 서비스 직종을 선정했다.

광주인자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지자체 및 관내 직업훈련기관과 공유해 2026년도 지역 일자리 정책 수립과 훈련과정 설계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임채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